
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

2023. 6.

자 본 시 장 국
기 업 회 계 팀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| 1 |
| II. 회계개혁 성과 및 평가 | 2 |
| III. 회계제도 보완방안 | 5 |
| 1.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| 6 |
| 2.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| 8 |
| 3.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| 10 |
| 4.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 | 12 |
| V. 기대효과 | 15 |
| VI. 향후 계획 | 16 |
| [참고] 회계개혁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| 17 |

I. 추진배경

□ '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

○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고,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* 신설('17.10월)

* ① 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, ②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, ③ 표준감사시간제 도입, ④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, ⑤ 과징금 제도 신설 등

□ 외부감사법 전부개정('17.10월)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이 5년 경과

○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이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심화

□ 다만, 감사보수 상승에 대한 기업의 불만만으로 회계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객관적·중립적인 시각이 필요

① 외부감사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만 투명한 회계는 투자자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

② 회계개혁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 정도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회계투명성이 제고된 것은 분명

* '13년부터 7년간 하향 추세이던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상승 추세로 전환

③ 감사보수가 급격하게 상승*한 것은 사실이나 감사보수 수준의 적정성**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

* 상장사 감사보수 상승률(%) : ('18년)14 ('19년)27 ('20년)29 ('21년)7 ('22년)14

** 상장사 감사보수/매출액(% , '21년) : (한국)0.17 (미국)0.44 (캐나다)0.33 (유럽)0.15

□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, 개선·보완 필요성을 검토

➡ 회계개혁 주요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도별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마련*

* 금융위(금감원), 기업회계업계학계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 구성운영('22.9~'22.12월)

* 추진단과 별도로 회계학회 연구용역 진행('22.10월~'23.2월, 공청회: '23.2.10)

II. 회계개혁의 성과 및 평가

1. 총 괄

□ **(성과)** 우리나라의 회계개혁은 대내외적으로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가 다수

○ 개혁 이후 상장회사의 감사시간이 늘어나고, IMD 회계투명성 평가 순위*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 시현

* IMD회계투명성평가(순위) : ('17) 63 ('18) 62 ('19) 61 ('20) 46 ('21) 37 ('22) 53

<회계개혁(17년)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시간>

| 구 분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총 상승률 | 연평균 상승률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상장회사 평균 | 1,700 | 1,875 | 2,192 | 2,366 | 2,410 | 2,669 | 57.0% | 9.4% |
| 2조이상 | 7,531 | 8,303 | 11,463 | 11,309 | 10,880 | 11,062 | 46.9% | 8.0% |
| 5천억~2조 | 2,479 | 2,687 | 2,901 | 3,852 | 3,808 | 3,880 | 56.5% | 9.4% |
| 1천억~5천억 | 1,190 | 1,309 | 1,401 | 1,494 | 1,554 | 1,964 | 65.0% | 10.5% |
| 1천억미만 | 837 | 925 | 953 | 1,055 | 1,120 | 1,069 | 27.7% | 5.0% |

○ 또한, 회계투명성에 대한 설문조사(기업관계자·공인회계사 대상, 금감원) 결과,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4년 연속 상승*

* 연도별 점수: ('18년) 3.66 → ('19년) 3.95 → ('20년) 4.42 → ('21년) 4.77

□ **(한계)** 최근 경기상황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와 맞물려 기업들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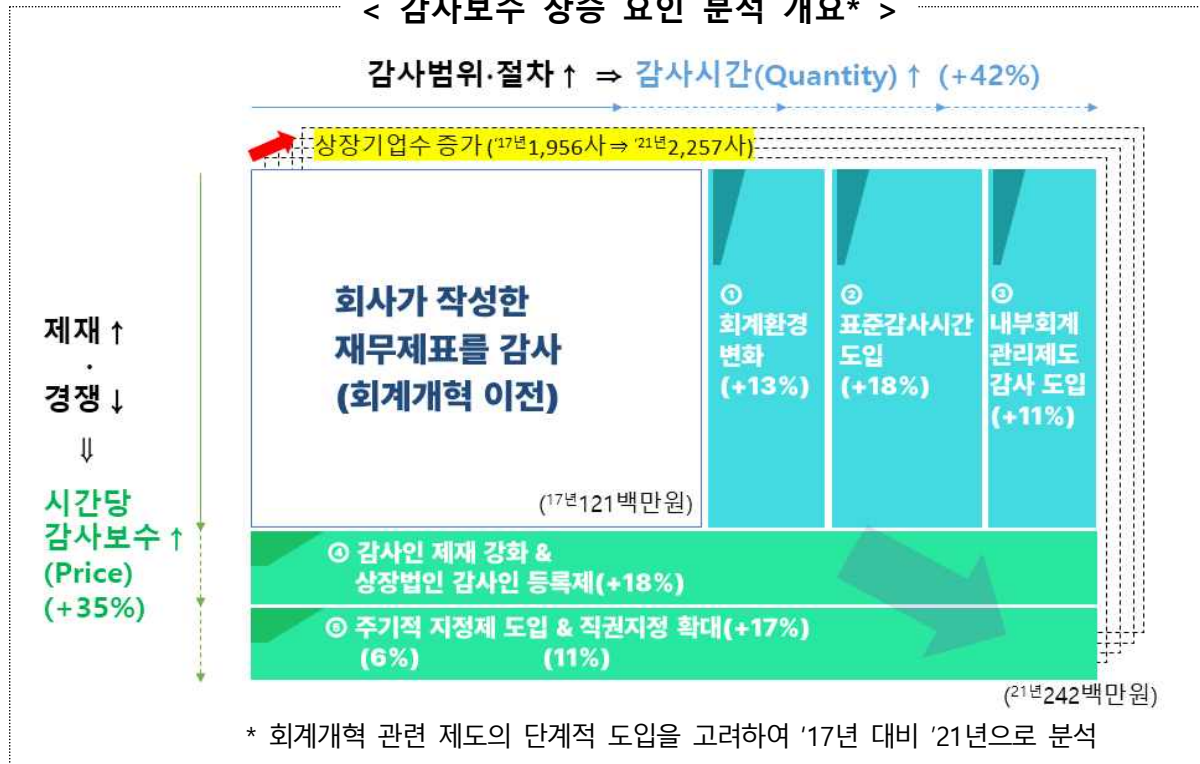
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·시행 ➡ 총 감사보수(P×Q) 증가

* 총감사보수 상승(100%)에는 감사시간과 시간당 단가가 각각 60% : 40% 정도 기여

<회계개혁(17년)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>

| 감사보수(천원)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총 상승률 | 연평균 상승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상장회사 평균 | 121,320 | 138,320 | 175,616 | 225,919 | 241,925 | 275,615 | 127.2% | 17.8% |
| 2조이상 | 553,687 | 625,699 | 923,077 | 1,078,019 | 1,121,709 | 1,156,386 | 108.9% | 15.9% |
| 5천억~2조 | 168,893 | 187,977 | 227,455 | 351,871 | 367,015 | 394,691 | 133.7% | 18.5% |
| 1천억~5천억 | 84,147 | 95,725 | 112,427 | 144,727 | 156,020 | 201,055 | 138.9% | 19.0% |
| 1천억미만 | 60,914 | 70,226 | 77,481 | 105,387 | 115,793 | 116,894 | 91.9% | 13.9% |

<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개요* >



➡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은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

②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중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('20년) 이후 큰 폭 상승하여 '22년에는 절반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음

<회계개혁(17년) 이후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현황>

| 지정감사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상장회사수 (코넥스제외) | 2,013 | 2,079 | 2,175 | 2,239 | 2,326 | 2,410 |
| 지정대상수 | 128 | 217 | 698 | 1,018 | 1,224 | 1,090 |
| 주기적지정 | - | - | 219 | 434 | 593 | 531 |
| 직권지정 | 128 | 217 | 479 | 584 | 631 | 559 |
| 지정 비중(%) | 6.4 | 10.4 | 32.1 | 45.5 | 52.6 | 45.2 |

○ 아직 외부감사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제고 여지가 있는 만큼 지정제가 필요하지만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문제

○ 자유선임은 감사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만큼, 지정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유인 저하

➡ 지정감사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2. 회계개혁 주요제도별 평가

1]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제 확대

- (내용) 상장회사(일부 비상장포함)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*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사유 확대**

*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

** ①3년연속 영업손실 ②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

- (현황) 상장회사 중 50%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수감
- (평가) 외부감사인 독립성 개선 vs 시장 경쟁원리 훼손

2]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

- (내용)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'검토'에서 '감사'로 상향

- (현황)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*으로 외부감사 시행

* (별도) 자산 2조원('19년) → 5천억원('20년) → 1천억원('22년)

(연결) 자산 2조원('23년) → 5천억원('24년) → 1천억원('25년)

- (평가)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vs 비용 대비 효익 낮음*

* 예) 거래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상장사는 '거래의 결과'인 증빙을 충실히 검증할 경우 거래의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도 회계오류 방지 가능

3] 표준감사시간제

- (내용) 공인회계사회가 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고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을 재조정('19.2월~, '22.1월 한 차례 개정)

- (현황) 표준감사시간, 지정제 확대 등으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시간이 상당 증가

* 상장사 평균 감사시간(시간) : ('17) 1,700 → ('22) 2,669 (+57%)

- (평가) 감사품질 개선(감사시간↑) vs 감사보수 부담 증가*

* 개별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감사시간 증가만 야기

Ⅲ. 회계제도 보완방안

기본 방향

- ◇ 現 회계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비용 대비 투자자 편익이 크지 않은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
- ◇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의 시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 마련

| 분야 | 추진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| ①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②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③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|
|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| ① 직권지정사유 축소 ② 주기적 지정제 보완 |
|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| ①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②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의 중립성 제고 ③ 기업·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|
|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| ①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②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③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④ 재무기준 지정사유 연속발생에 따른 부담 완화 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⑥ 지배·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|

1.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

- **[현행]** '23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체 상장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(이하 '연결 내부회계')가 도입*되어 외부감사 실시 예정

* ('23) 자산 2조 이상 → ('24) 자산 5천억 이상 → ('25) 자산 1천억원 이상

-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중소형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*이 큰 부담으로 작용

* (비용 예시) 지배·종속회사 연결 내부회계 구축·유지비용, 지배·종속회사 감사인의 추가 감사시간 투입비용, 지배·종속회사 간 회계, 자금, IT시스템 통합비용 등

※ 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('23년) 수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비용은 약 1,100억원 수준(회사당 6.2억원)

- 또한, 연결 내부회계의 구축·평가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무 혼선 발생 우려*

* 現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 구축·운영·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'유의적 부문'에 대해 감사인별로 다양한 관점 존재 → 일관된 기준 제시 필요

- **[개선]**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감안해 중견·중소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를 조정하고, 연결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

- 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('24년→'29년)

- ②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 일정('23년)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

- 대형 상장사(2조원 이상)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결 감사준비도 일정 부분 마친 점 등을 감안*

* '21.12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1년 유예('22년→'23년)

- 다만, 내부 상황에 따라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*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 허용

* (절차) 유예 요청(기업→금융위) → 연결 내부회계 유예사유 및 도입시기 공시(기업)

<자산규모별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 조정>

| 연도 | 2023 | 2024 | 2025 | ~ | 2029 | 2030 | 2031~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(현 행) | 2조 ↑ | 5천억 ↑ | 5천억 ↓ | 전체 도입('25년~) | | | |
| (개 선) | 2조 ↑ | 5년 유예 | | | 5천억 ↑ | 5천억 ↓ | 전체 도입('30년~) |

㉓ 연결 내부회계 시행일부터 2년간은 '제도 위주'*로 감리

* '고의'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아닌 이상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

👉 (조치 필요사항)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, 감독지침 마련 등

2.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

- **[현행]** '23사업연도부터 종속기업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을 '별도' 및 '연결' 기준으로도 보고받아야 함

* **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시기**

[별도] ('19) 자산 2조 이상 → ('20) 5천억 이상 → ('22) 1천억 이상

[연결] ('23) 자산 2조 이상 → ('29) 5천억 이상 → ('30) 1천억 이상

-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는 종속기업 내부회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 → 중복 보고 필요성 낮음

- **[개선]**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(→연결 감사의견으로 일원화)

※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(美·日)도 연결 감사의견만 보고

👉 (조치 필요사항)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

3.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

- **[현행]** 중소 비상장회사(자산 1~5천억원)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*하여 부담 가중

* 중소 비상장회사(자산 5천억미만)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비용('23.1월 기준)
- 구축비용(1회성) : 약 0.71억(평균 감사보수의 50% 수준)
- 감사비용(매년) : 약 0.58억(평균 감사보수의 40% 수준)

-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회사의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

- **[개선]** 중소 비상장회사(자산 1~5천억)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*

*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'검토' 받도록 함

※ 주요 선진국들도 중소 신규 상장사에게는 일정기간(美5년, 日3년) 내부회계 외부감사 유예

👉 (조치 필요사항) 외부감사법 개정

2

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

1. 직권지정사유 축소

- **[현행]** 회계개혁('17년)으로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지정사유가 큰 폭 확대*(11→27개)

* 3년연속 영업손실,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

- 다만,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*이 존재하고,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** 까지 지정함에 따라 상장회사 지정비율(주기적 지정 포함)이 과도하게 증가(50% 이상 수준) ➡ 감사인간 품질경쟁 저해 우려

* 예)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중복

**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, 부정행위 등 보고의무 위반,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등

- **[개선]**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 사유는 폐지·완화 (現 27개 中 16개 사유 폐지·완화)
 - '재무기준 미달' 사유와 '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' 사유는 폐지(2개) 하고, 감사절차 등 '단순 경미한 절차위반'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*(14개)
 - * (1차 위반시) 과태료 부과, (2차 위반시) 직권 지정
 - 자발적 지정사유*(4개)와 회계부정 연관성이 높은 사유**(7개)는 유지
 - * 회사요청, 주주·채권자 요청, 상장예정법인, 타 법령 요청
 - ** 감리조치, 관리종목 지정, 횡령 등 공소제기 등

☞ (조치 필요사항)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

2. 주기적 지정제 보완

- **[현행]** 상장회사와 일부 대형비상장회사*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택한 경우, 그 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**(6+3)
 - *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
 - **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(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)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하여 순차적으로 매칭하는 방식
- '19.11월, 220개사의 '20년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약 220개사씩 지정 중*(23.2월 기준 전체 지정대상의 약 60% 지정)
 - * 전체 상장사 등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1회 적용하는데 약 8년 소요 예상
-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되어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(회계법인)과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기업부담만 증가했다는 의견(기업)이 대립

※ (참고)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('22.11월~'23.2월) 中 “주기적 지정제” 관련 내용

- (실증분석)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지정기업에게 감사보수 상승과 감사품질 제고 동시 시현 추정
 - 다만, 분석범위의 한계(지정 3년차('22년) 효과 미반영) 등으로 인해 대안 도출을 위한 실증근거가 부족
- (제언) 현 제도(6+3)가 충분히 시행된 이후,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대안 도출 필요

- **[대응]** 당분간은 現 주기적 지정제(6+3)를 유지하되,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검토*

*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(회계학회)

* 보완방안(예시) : 자유vs지정 비율을 2:1에서 3:1 수준으로 완화(9+3, 6+2 등)

-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간 형평성 문제* 방지

* 현 제도도입 이후 전체 지정대상 기업 중 1회 이상 지정(주기적+직권)된 기업은 약 60% 수준(약 40%는 지정감사 수감 전)

- 지정 종료 後 자유선임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

3

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

1.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

- **[현행]** 표준감사시간은 일반적·평균적 감사시간으로 적정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지표(guide)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

- 그러나, 법령*과 한공회 내규**에 강행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입취지와 달리 '법정시간' 또는 '최저감사시간'으로 인식되는 경향

*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기업은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직권지정(외부감사법§11⑩10.)

** ①한공회 회칙 §16(회원의 의무) :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회원의 준수 의무 규정

②한공회 행동강령 §25 : (표준감사시간 미달시) 품질관리실 검토 요구, 행동강령 신고센터 신고의무 규정 등


- **[개선]**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*하여 업무관행 개선

* 예) ①한공회 회칙에서 '회원의 의무' 중 '표준감사시간 준수' 삭제, ②한공회 행동강령에서 표준감사시간 미달시 행동강령 신고센터 의무규정 폐지 등

☞ (조치 필요사항) 한공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


2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의 종립성 제고

- **[현행]**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인, 회계법인 5인, 회계정보이용자 4인*, 금감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
 - * 한공회장이 위촉(교수, 신용평가회사 임원, 기업체 사외이사 등)
- 한공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과 금감원이 추천한 위원 1명이 출석하면 기업계 위원(5명) 없이도 개의 및 결의 가능*
- * 심의위는 전체 위원 2/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**[개선]** ‘회계정보이용자’ 위원 규모를 축소(現4명→2명)하고,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
 - 표준감사시간 공신력 확보를 위해 ‘회계정보이용자’ 위원(2명)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위촉

 (조치 필요사항)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

3. 기업과 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

- **[현행]** 감사인은 감사계약시 기업에 감사투입예정시간과 그에 근거한 감사보수를 제시
 -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 회계법인은 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감사시간과 일치하는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감사시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
 - 기업은 감사시간 산출내역과 감사내용 등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워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적정성 파악 곤란
- **[개선]**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*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
 - * 감사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, 시간당 감사보수, 감사투입인력 현황, 피감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, 전기 감사시간과의 차이 발생 이유 등

 (조치 필요사항)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

1. 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

- **[현행]**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(금감원·한공회)와 상담센터(상장협·코스닥협)를 운영 중('19.10월~)이지만 **활용도가 저조**
 - * 대부분 유선을 통한 단순 문의(감사보수 적정성, 제도 관련 질의) 위주
 - 이는 **동 센터(신고/상담)의 조정 기능과 독립성에 대한 기업들의 의구심***과 감사 수감과정에서의 **불이익 우려** 등에 기인
 - * 예) ①한공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감사인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, ②신고처리 과정에서 감리권한을 보유한 감독기관(한공회/금감원)에 의한 감리조치 우려 등
- **[개선]**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(거래소, '22.9월 설치)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
 -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, **권한남용행위** 적발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 징계(증선위에 건의)

2.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

※외감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

- **[현행]** 자유 선임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감사팀이 회계법인 편의대로 구성되는 경향
 - 지정감사인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자료요구 등 감사대응 실무에 어려움 초래
- **[개선]**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과
 - 감사팀 내 **산업전문인력***이 전무할 경우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기업 2개 차감(최소 1명 이상 확보)
 - *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(6개)로 구분하되, 제조업서비스업은 세분화 → 총 15~20개
 - 감사팀의 산업전문성을 감사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지표에 반영
 - *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(외감규정 §8① 별표1)에 따라 감사인(회계법인)이 구비해야 하는 담당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에 '감사팀 산업전문성 수준' 추가

3.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

※외감규정 개정사항

- **[현행]** 現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*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

* 기본점수 = 등록회계사수(회계사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) + 0.5 x 수습회계사수

- 고년차 회계사가 많을수록 지정기업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력 대비 많은 기업이 배정 ➡ 감사품질 악화요인으로 작용

- **[개선]** 인력 대비 적절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(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)

<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>

| 구분 | 2년 이상 | 6년 이상 | 10년 이상 | 15년 이상 | 20년 이상 | 30년 이상 | 40년 이상(산술)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현행 | 100 | 110 | 115 | 120 | 120 | 120 | 120 |
| 개선(예) | 100 | 105 | 110 | 115 | 120 | 110 | 100 |

4.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 부담 완화

※외감규정 개정사항

- **[현행]**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(3년) 中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(3년)이 새롭게 시작

-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*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,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발생

*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(-)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

- **[개선]**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中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,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* 보장** (1~3년)

* 외감법(§10)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: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(3년), 그 외 회사(1년)

**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

※ (예시) 지정사유가 추가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비교(현행/개선안)

|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
|-------|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재무기준A | | | 재무기준B | | | |
| (현행) | 총 지정감사 6년 (A사유('23~'25년) + B사유('26~'28년)) | | | | | | |
| (개선안) | 지정감사 기간 3년 | | | 자유선임기간 3년 | | | |

5.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

※외감규정 개정사항

- **[현행]** 외감법령상 재무기준*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

*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(-)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

※ 現 외감법령 상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(예)외감대상,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자산기준 등)

- 그러나,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* 존재

*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지정

- **[개선]**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“별도재무제표상”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

※ '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'(4,5번 과제 관련)는 폐지(외부감사법 개정사항)할 계획(9쪽 참고)이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先 조치

6. 지배·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

※외감규정 개정사항

- **[현행]** 지배·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 지배·종속기업에 각각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빈번

- 이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 요청시(법 §11①1호)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사전통지하고 회사가 재지정 요청시* 지정 감사인을 변경하는 감사인 지정 업무 프로세스에 기인

* ①지배·종속기업 감사인 일치, ②외국투자자 출자조건 제한 등은 재지정 사유에 해당

- **[개선]** 회사가 지배·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, 사전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

Ⅳ. 기대효과

| 구분 | 내용 | 적용 대상 | 예상 효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1.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| | | |
| 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범위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|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 별도 감사의견 공시의무 면제 |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(약 1,500개사) | · 별도 내부회계 감사비용 감소 (회사당 약 7백만원) |
| 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|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한시 유예(5년) |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(약 2,300개사) | · 연결 내부회계 도입 비용* 감소 *연결 내부회계 구축 및 추가 감사비용, 지배·종속회사 회계 시스템 통합비용 등 |
| ■ 연결 대상 종속기업 기준 명확화 |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범위 단계적 확대 |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(약 1,500개사) | ·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정착 |
| ■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경감 | 자산 5천억 미만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| 자산 1~5천억원 신규 상장회사 | ·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감소(3년간) (회사당 약 186백만원) |
| 2.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합리화 | | | |
| ■ 주기적 지정제 보완 | 현 제도(6+3)를 한 주기 시행 후 보완 여부 검토 |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* *상장회사, 대형비영리회사(자산 5천억 미만) | · 기업 간 형평성 및 제도 보완을 위한 데이터 확보 가능 |
| ■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 | 직권지정 사유 정비 (총 27개→11개) | 직권지정 대상기업 | · 상장회사 지정비율 완화를 통한 감사 품질경쟁 유도 |
| 3.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| | | |
| ■ 가이드 성격임을 명확화 | 표준감사시간 강행규범성 우려 해소 | 외감 기업* *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(약 20,500개) | · 회사/감사인 간 외부 감사계약 관련 분쟁 감소 |
| ■ 심의위원회 구성을 편향되지 않게 개선 | ‘정보이용자’ 대표 위원 추천기관 변경(한공회→금융위(금감원)) 등 | | ·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기업 수용도 제고 |
| ■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| 감사계약 체결보고(기업→금감원) 양식 개선 | | · 회사/감사인 간 외부 감사계약 관련 분쟁 감소 |

Ⅳ. 향후계획

-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, 입법필요 사항(법률, 시행령 등)은 '23.4분기 완료'를 목표로 추진

| 추진과제 | 조치사항 | 담당 |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.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| | | |
| 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제도 개선 | | | |
| 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| 시행령 개정 | 금융위 | '23.4분기 |
| ② 연결 대상 종속기업 기준 명확화 | 감독지침 등 마련 | 금융위· 금감원 | '23.3분기 |
| 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범위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| 시행령 개정 | 금융위 | '23.4분기 |
| ■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부담 경감 | 법 개정 | 금융위 | '23.4분기 |
| 2.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합리화 | | | |
| ■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| 법·시행령 개정 | 금융위 | '23.4분기 |
| ■ 주기적 지정제 보완 | 추후 검토 | 금융위 | - |
| 3.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| | | |
| ■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| 한공회 회칙· 행동강령 개정 | 금융위· 한공회 | '23.2분기 |
| ■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의 중립성 강화 | 시행령 개정 | 금융위 | '23.4분기 |
| ■ 기업·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·조정 내실화 | 시행세칙 개정 | 금융위· 금감원 | '23.3분기 |
| 4. 지정감사 부담 완화 | | | |
| ■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| 중기 회계지원센터 내 운영 | 금융위· 거래소 등 | '23.2분기 |
| ■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| 외감규정/ 시행세칙 개정 | 금융위· 금감원 | '23.3분기 |
| ■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| 외감규정 개정 | 금융위 | '23.3분기 |
| 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| 외감규정 개정 | 금융위 | '23.3분기 |
| 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| 외감규정 개정 | 금융위 | '23.3분기 |
| ■ 지배·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| 외감규정 개정 | 금융위 | '23.3분기 |

1. 추진배경

- 1981년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수 차례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, 국내 기업회계 전반의 대대적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
- '17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이후 대규모 분식회계를 방지하고, 국내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해 「회계개혁」을 추진
 - 과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,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,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

2. 주요내용

< 회사 :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 강화 >

- ①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
 - 구글, 샤넬 등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과세투명성 확보 및 국내 기업과의 경쟁환경 형평성 제고
- ②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(감사 또는 감사위원회)로 이관
 - * (기존)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
 - 회계부정 적발·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책임 강화
 -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
- ③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* 외부감사 의무화
 - * 기업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
 -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자체적인 사전예방 기능 강화

< 감사인 :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품질 제고 >

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

-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非상장사*에 대해 9년 주기로 6년 자유선임 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

*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& 대표이사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

→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및 기업과의 유착 방지 가능

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

-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

→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 유도

< 정부 : 회계부정·감사부실에 대한 감독 역량 및 제재수준 강화 >

⑥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제도 신설 (절대금액 상한 없음)

*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상 재무정보 공시 위반으로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 부과(과징금 부과대상이 상장사,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한정됨)

| 회 사 | 회사 관계자 | 감사인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분식액 20% 이내 | 회사 과징금 10% 이내 | 감사보수 5배 이내 |

⑦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

*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, 직무정지 등 조치

⑧ 회계부정·감사부실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

* 징역 (5~7년 → 10년 이하) 및 벌금 (5~7천만원 → 부당이익의 1~3배 이하) 상향

< 주요 제도 시행시기 >

-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,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, 유한회사 외감법 적용은 2019.11.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-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

| 자산총액 | 2조원 이상 | 5천억원 이상 | 1천억원 이상 | 기타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시행시기 | 2019년 감사보고서 | 2020년 감사보고서 | 2022년 감사보고서 | 2023년 감사보고서 |